

04

버려야 할 관행, 지켜야 할 원칙

뉴스 기사는 저널리즘의 현실을 스스로 말한다. 시민의 신뢰가 추락하는데도 기사의 품질이 제자리걸음하는 이면에는 잘못된 취재 보도 관행이 공고히 자리 잡고 있다. 시급히 바뀌어야 할 대표적 관행을 짚어보고 올바른 보도 원칙을 제시한다. 이 기획은 저널리즘 품질 향상을 고민하는 '좋은저널리즘연구회' 회원들이 돌아가며 집필한다.

뉴스 신뢰도의 출발점, 취재원

익명 취재원 비율 KBS 28%, BBC 6%... 실명보도 훈련하는 조직문화 정착돼야



김경모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좋은저널리즘연구회

한국 언론에 대한 낮은 신뢰도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조사한 시계열 결과를 보더라도 신뢰도 저하 추세가 뚜렷하다. 반등해 회복될 단서나 기미도 찾을 수 없다. 로이터 저널리즘연구소가 집계하는 언론 신뢰도 국제 비교 자료를 보면 조사 대상 국가 중 한국이 최하위 그룹에 속해 있는 부끄러운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언론 신뢰도와 직접 연관된 뉴스의 품질 역시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좋은저널리즘연구회가 PEJ 지수 등을 이용해 국내 10개 중앙 일간지와 해외 유력 신문인 뉴욕타임스, 더타임스, 아사히신문의 뉴스 품질을 분석한 연구서 《기사의 품질》은 한국 언론의 뉴스 품질이 '위험 수준'이라는 것을 경고한다. 방송 뉴스도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다.

시걸(1973)은 '취재원이 그러하다고 말한 바가 곧 뉴스'라는 취지로 뉴스를 정의한 바 있다. 뉴스의 품질

이나 신뢰도가 모두 취재원 문제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저널리스트가 모든 현장을 직접 관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기사화할 모든 사안에 대해 정통하지도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기사의 품질과 신뢰도는 핵심 정보와 의견을 제공하는 취재원의 식견과 전문성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접촉하는 취재원이 사안에 정통하고 믿을만한 인물인지, 그가 전달하는 정보가 왜곡되지 않았는지 재확인하고 선별하는 것은 당연히 기자와 언론사의 몫이다.

뉴스를 미시적으로 본다면, 기사 취재와 작성을 위해 저널리스트가 이용하는 취재원이 뉴스의 품질과 신뢰도를 결정짓는 출발점이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뉴스의 핵심 정보를 제공하는 취재원과 정보 출처의 정확성과 균형성 그리고 전문성과 신뢰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취재원과 정보 출처를 뉴스 기사에서 정확하고 빠짐없이 제공하는 것은 저널리즘의 원칙에 해당한다. 취재원의 투명성은 기자가 얼마나 정당한 방법으로 정확한 정보를 습득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자, 기사의 신뢰도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점에서 좋은 저널리즘의 기준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예외 없는 원칙 없다'는 말처럼 언론 현장엔 불가피하게 익명 취재원을 활용해 보도해야 할 상황도 발생한다. 뉴스 제작 과정에서 취재원 비닉권(秘匿權, Protection of sources)의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히는 익명 보도는 취재원의 신원이나 소재를 가려 이들을 보호하는 기사 유형을 말한다. 익명 보도는 취재원의 발언권과 자유를 확보해 훨씬 더 풍부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동시에 익명 정보가 과장되거나 위조될 수 있어 기사와 언론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약점도 지적된다.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신원을 익명 처리할 경우, 독자와 시청자는 정보의 정확성을 판단할 근거가 없어 그것이 과연 믿을만한 기사인지 의심의 여지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익명 보도의 가이드라인

익명 보도는 이처럼 양면성을 지닌다. 때문에 한국과 영국을 대표하는 두 공영방송 KBS와 BBC도 뉴스 제작과 편집 가이드라인에서 익명 취재원을 사용하는 경우를 명시한다. 흥미롭게도 두 방송사의 가이드

라인은 ①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②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③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신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④오프더레코드를 조건으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익명 취재원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공통점을 지닌다. 또 반드시 익명으로 처리해야 할 사정이라면, 철저하게 익명성을 보장하도록 조치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물론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는 대목도 찾을 수 있다. 가령 익명을 위한 기술 처리(모자이크, 음성 변조)에 대해 KBS의 규정은 취재원을 완벽하게 가리는데 초점을 맞추지만, BBC는 방송 품질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하라고 주문한다.

많은 경우, 실명 보도를 원칙으로 앞세우는 언론사의 취재 준칙이나 윤리 강령이 익명 허용 조항을 상당히 폭넓게 해석할 여지가 있어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받는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의 구체성이나 적실성을 염려하기보다는 조직 차원에서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육과 훈련을 통해 기자의 내면화를 유도하고 실천 의지에 대해 독려하고 점검하는 관행 정착과 조직문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공영방송의 전형으로 평판이 자자한 BBC는 익명 보도와 관련해 KBS와 유사한 가이드라인을 지침으로 두고 있지만, 기자 개인의 규정 내면화 정도나 조직적 실천의 강도는 우리와 전혀 다르다. 최근 BBC의 한 기자는 필자가 포함된 연구진과의 개인 인터뷰에서 "기자 초년 시절 익명 취재원 이용에 관한 가이드



“

뉴스를 미시적으로 본다면, 기사 취재와 작성을 위해 저널리스트가 이용하는 취재원이 뉴스의 품질과 신뢰도를 결정짓는 출발점이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뉴스의 핵심 정보를 제공하는 취재원과 정보 출처의 정확성과 균형성 그리고 전문성과 신뢰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취재원과 정보 출처를 뉴스 기사에서 정확하고 빠짐없이 제공하는 것은 저널리즘의 원칙에 해당한다.

”

라인을 외우도록 훈련받고, 상급자 앞에서 이를 확인 받고 발표까지 하는 엄격한 교육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영국군의 이라크 침공 개입 보도 과정에서 발생했던 이른바 ‘길리언-켈리 파문’은 BBC의 역사에 오점으로 남겠지만, 위기를 새로운 전환기로 삼은 조직의 저력을 보여줬다. 파장 이후 광범위한 조사를 거쳐 떠낸 보고서와 후속 조치를 보더라도 BBC가 익명 취재원 이용에 어느 정도로 민감하게 대처하고 엄격하게 관리 시스템과 보도 관행을 재정립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사의 핵심 취재원을 익명 처리하거나 단일 익명 출처에 의존하려면 편집 정책을 확인하고 법률 자문을 받도록 했다.

그렇다면 한국 방송뉴스의 익명 취재원 이용 관행과 보도 실태는 어떠한가? TV뉴스의 익명 보도에 대한 방송기자의 인식을 질적 분석한 이윤희와 조연하(2017)에 따르면, 일선 기자들은 익명 보도를 불가피한 선택으로 너무 쉽게 용인하는 경향을 보인다. 언론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지식을 그때그때 '도제식'으로 대물리면서 익명 취재원 오남용의 폐해를 깨닫는 교육과 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뉴스 보도가 익명 보도를 둘러싼 잘못된 관행의

실천 방식이나 결과로 가이드라인의 제한적 지침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과도한 익명 보도는 기자가 조직 차원의 법률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해 책임 문책이나 소송 시비에 휘말리는 게 성가시고 두려운 나머지, 방어기제를 작동시킨 결과로 이해되기도 한다.

KBS와 BBC의 익명 취재원 이용 실태

그래서 방송뉴스의 익명 취재원 이용 실태를 가늠하고자 KBS '9시뉴스'와 BBC '10시뉴스'를 대상으로 사운드바이트의 익명 처리 여부를 비교 분석해봤다. 큰 이슈나 사건이 없었던 2018년 11월 셋째와 넷째 주 뉴스(주말 제외한 열흘 치)를 임의 선택했다.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주 구성 표집(constructed week sampling)과 같은 랜덤 표본이 아니고 분석 사례수도 적어 무리가 있다. 하지만 익명 취재원 이용 실태에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KBS는 분석대상 193건 가운데 익명 취재원을 사용한 기사가 54건(28%)이었다(우리나라 신문과 방송의 익명 취재원 비율이 25~30% 정도라는 기존 연구들과 비

슷한 수준이다). 직업 분포에서 정부인사(공무원), 기업인, 일반시민의 익명 처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일반 시민은 단순히 분위기나 배경지식을 전하는 인터뷰임에도 익명으로 등장하는 사례가 상당했다. 정부인사(공무원)는 반투명 취재원(소속기관만 드러나고 실명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회부 고발기사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자로서 해명성 인터뷰를 싣는 사례가 주로 해당됐다. 대통령, 주요 정치인, 청와대 관계자는 거의 실명이었다.

한편 BBC는 분석기사 78건 가운데 오직 5건(6%)만 익명 취재원을 사용했다. 익명 인터뷰는 미성년자 또는 범죄 관련 보도에서 인용되는 일반시민과 범죄 관계자만 해당됐다. 예외 없이 취재원의 사생활과 신변 안전을 보장하려는 취지가 뚜렷한 사례로 국한됐다. 익명 취재원을 반투명 처리한 어정쩡한 기사는 한 건도 없었다. 직업과 지위에서 정치인, 기업인, 공무원 등 유력자는 모두 실명으로 투명하게 등장했다. 일반 시민도 거의 실명 인터뷰로 출연했다.

익명을 보장하고자 취재원 인터뷰를 기술적으로 처리하는 방식도 눈에 띈다. KBS는 익명 인터뷰의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음성 변조한 경우가 전체 사운드바이트 인터뷰의 32.5%(83건/255건)에 달했다. BBC의 경우, 사운드바이트 인터뷰 사례(110건) 가운데 모자이크나 음성변조를 사용한 경우는 단 두 건(1.8%)에 그쳤다. 화면에 등장하는 취재원 주변 인물의 얼굴을 가리는 지저분한 영상 처리도 없었다. KBS는 자사 규정에서 제3자가 익명 취재원의 신원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화면 구성에 주의를 당부하지만, BBC는 방송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 처리를 규정한다. 어떤 규정이 더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KBS 뉴스에서 모자이크와 음성 변조된 영상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시청자가 품질 좋은 방송을 시청할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뉴스의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필자와 개인 인터뷰에서 KBS의 한 간부급 중견기자는 실명 보도에 따른 소송 위협과 과도한 항의가 다반사인 현장 고충을 토로하면서 이런 견해에 대체로 동의했다.

가이드라인의 규정만 놓고 보면 두 방송사 모두 익명 취재원 이용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규정 역시 비슷한 수준과 유형으로 명시돼 있다. 양쪽 모두 실명 보도가 원칙이지만, 사회적 약자(범죄피해자, 미성년자, 심신미약자)의 신원 보호에는 주의할 것을 강조한다. 신분을 가리지 않으면 출연을 고사하거나 실명 노출을 완강히 반대할 경우 익명 취재를 허용한다고 예외 규정을 두는 것도 비슷하다. 그렇다면 위에서 보듯 두 방송사의 익명 취재원 이용 행태에 차이가 나는 이유를 가이드라인이나 윤리 강령의 문제로 돌리기는 어렵다. KBS와 달리 BBC는 기자 개인적으로나 조직적으로 익명 취재원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관행이 정착된 조직문화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필자 주: 원고 작성 과정에서 분석 자료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토론회에 응해 준 MBC 오해정 기자에게 감사드립니다.